

## 남북관계에서도 소통과 신뢰가 중요

박 명 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장)

###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벽에 부딪치면서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태까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적 재조정을 공언한 새 정부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렬한 비난이 맞물려 당국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민간분야의 교류가 큰 차질을 빚지 않고 있으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심각한 후퇴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반면 북미 간에는 상당한 협상이 진전되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변의 냉각탑 폭파 계획과 뒤이은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고 북일관계에도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관계보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던 것을 생각하면 최근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다. 국제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앞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또 북핵문제는 성격상 국제적인 맥락에서 해결의 단초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크지만 현재와 같이 서로 상반된 방식으로 어긋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상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는 것이 좋다.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연결될 때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조건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 개선 노력 필요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간의 신뢰 창출과 소통의

노력이라고 본다.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안도 같은 문제로 이해되지만 60년 이상 상호불신 상태가 지속되어 온 남북한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형성은 특히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미래전망의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긴요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에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뚜렷하게 알리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전면적인 압박정책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협력정책인지, 비핵화는 선행조건인지 병행사안인지, 이전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의 전면부정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인지 등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지 못했다. 실용주의로 표현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애매함을 견지한 상태에서 불거져 나온 일부 책임자들의 강경한 언사와 정권 초기의 여러 일들, 예컨대 통일부 해체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 군수뇌부의 정제되지 못한 표현 등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위축과 불신을 초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지금까지 발전해오던 남북관계의 기존 틀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지 표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마도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두 차례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인정여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기본합의서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상회담의 가치를 부차화하려 하지만 정상회담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기본합의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측 최고지도자가 서명한 협정을 무시하고서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두 선언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장기적인 약속의 유효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최근의 긍정적 신호들

다행히 최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대북식량지원의사를 밝힌 것이나 6.15 선언기념식에 참여하고 또

그 실천을 위해 협의할 의사를 피력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측케 한다. 하지만 신뢰의 구축을 위해 주어진 기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은 물론이고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 다자안보포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간 새로운 신뢰형성의 계기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의 3통 문제를 들어 남한의 약속 불이행을 비난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에서의 3통 문제는 작년의 10.4 공동선언에 담긴 중요한 약속 중의 하나이지만 오랫동안 남측이 요구해온 부분이다. 이런 쟁점을 적시하여 남북한 합의이행 조치를 촉구한 북한의 이번 요구는 남북간의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신뢰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체적인 조치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 전반에 필요한 사안들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때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소통은 정부의 구상과 비전을 국민들은 물론이고 북한당국자 및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 이것은 결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관적인 희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소통은 유능한 입만큼 정교한 귀가 필요한 일이며 고도의 정책적 머리가 동반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희망과 기대들을 정확히 파악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입장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남한의 비전과 의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당국자간의 만남과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흔히 '성과 없는 대화는 필요 없다'고들 하지만 소통의 문제는 오히려 기능적이고 계산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책

임자들을 통한 소통의 노력이나 필요한 경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사의 파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는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주는 효과는 특히 소통의 차원에서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책임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런 연계전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의 주체나 성격, 시기나 분량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소통과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새 정부의 청사진 재정비 노력 필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새롭게 다듬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실현과정에 대한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 이외에도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감안하면서, 또 북한의 실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대북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족쇄처럼 묶어두고 있는 전제, 다시 말해 지난 10년의 역사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선입견을 털어버려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정책비판의 시각과 개념들을 그대로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간주할 경우 정작 남북관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실천가능한 사안들을 무위로 돌려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할 일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지 과거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이전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국민의 신뢰와 합의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하는 최고의 수준의 국가전략 사안이다. 장기적 비전에

따라 북한도 설득하고 시민의 동의도 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도 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통일한국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과 국가전략 없이 '실용주의'라는 편의적인 논리만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장기적인 불안정성은 물론이고 단기적 효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난마처럼 얽힌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즉각적 효과를 낳을 묘책이나 내부정치의 이익을 찾으려하기보다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로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도 총괄적인 성찰과 방안마련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특히 대북관련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얻으려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통은 결코 홍보가 아니며 입에 앞서 귀를 필요로 하는 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신뢰구축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해결하는데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